

“화성연쇄살인 반인권적 수사 밝혀야”...진실규명 신청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사건 은폐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이 제출됐다.

25일 법무법인 다산은 진실화해위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관련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에는 이춘재 8, 9차 사건과 초등생 사망사건 피해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경찰이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한 이들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체포, 감금, 폭행 등 가혹행위, 자백 강요, 증거 조작 등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초등생 사망 사건의 경우 시신 일부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암장하고 증거를 조작, 살인을 실종 사건으로 왜곡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춘재 사건 경찰 수사 피해 관련 신청

“용의자 2만1280명, 위법 피해 적잖아”

“부정 이미지 제거만...피해 회복해야”

이들은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1986년경부터 마지막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된 2006년까지 약 20년 동안 2만1280명이 용의선상에 올랐고 이들 중에는 위법수사 피해자가 적지 않다”고 했다.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이라며 “당시 경찰들 및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최근 경찰 재수사는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8차 사건과 이춘재 살인으로 드러난 초등생 사건 외에는 사건 용의자로 몰려 반인권적 수사를 받은 피해자 사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사기록에 불법체포, 감금, 폭행 등 가혹행위, 허위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 관련 증거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열람등사를 대부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절차와 인권 관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음에도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는 점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1986~1991년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영구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이춘재가 특정되면서 조사가 이뤄졌고 다수의 살인, 강간 범행이 드러났다.

또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약 20년 억울하게 옥살이한 윤성여씨에 대한 재심이 이뤄졌다. 범원은 유죄 근거가 된 윤씨 진술이 당시 경찰 가혹행위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구속수사를 받다가 풀려난 뒤 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씨의 형은 이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했던 형사들이



이춘재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초등생 사망 사건 유족은 “경찰이 은폐시킨 사건이라면 공소시효는 없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다산 측은 “수

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용의자로 몰리고 허위자백한 경위를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석욱기자



불안 노래연습장 업주들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전국 시도 노래연습장업연합회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하며 각종 노래방

기계를 부수고 있다.

여수 확진자 방문 ‘나주시청 사무실 폐쇄’...직원 진단 검사

전남 나주시청 한 부서가 최근 코로나19 잠복기에 있던 외지인 방문 사실이 확인돼 임시 폐쇄 조치됐다.

나주시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장애인 관련 복지 프로그램 설명을 위해 분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한 여수 주민 A씨(전남 716번)가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병상으로 이송됐다.

A씨가 확진되자 나주시는 임시 폐

쇄한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긴급 소독하고 해당 과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들 직원들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격 격리 조치했다.

CC(폐쇄회로)TV 판독 결과 A씨는 지난 22일 나주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약 20분간 머물렀으며,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광주 북구 주민 B씨(광주 1499번)와의 접촉에 의한 ‘n차 감염’으로 추정된다.

방역 당국 역학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일 여수를 방문한 B씨와 접촉 후 24일부터 유증상이 나타나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취재본부

이재용·특검 “재상고 없다”...징역 2년6월 사실상 확정

이재용, 박근혜·최서원에 뇌물 등 혐의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53)부회장에 이어 특검 측도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25일 기자회견에 입장문을 보내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5년~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 등에게 각 징역 2년6월 등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 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법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임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

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며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해당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도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양측 모두 이날 재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오는 26일 0시 이 부회장의 형은 확정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에 따른 횡령 금액을 86억8081만원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따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봤다. 또 국회증인감정법 위반 역시



유죄 판단했다.

아울러 장총기(65)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에게도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57) 전 전무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민정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